



<분기보고서>

경영/노동 이슈전망

【2021_2Q】

(문의) 정책실 (031-727-2830)

경제 및 경영 이슈

1.2021년 상반기 경제운용 성과 (*기획재정부_2021.6.28.)

- 성장은 빠른 회복세로 '21년1분기에 1.7% 성장
- 수출은 1~5월 수출액이 2,484억불로 역대 최대치 경신
- 고용은 3월이후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점차 회복중
 - * 취업자수 증감 ('21.1 98만2천명 감소)->('21.2 47만3천명 감소)->('21.3 31만4천명 증가)->('21.4 65만2천명 증가)->('21.5 65만9천명 증가)

【분석&해설】

- ▷ 정부가 지난해 역대 최대인 310조원 규모의 강력한 재정정책을 펼치고 '21년 들어 내수, 투자활성화, 수출력 보강 등을 통해 국내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임.
- ▷ 정책수단으로는 내수관련 △특별소득공제 △고효율가전 구매환급 △소비 쿠폰지급 등. 투자관련 △110조원 투자프로젝트,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 △유턴기업 지원 강화 등. 수출관련 △비대면·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지원, 수출금융 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함
- ▷ '21년 들어 당초 정부 예상 및 주요국 대비 경제지표는 빠른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음.
- ▷ 그러나 'K'자 성장이라는 우려와 함께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상당수의 소상공인 자영업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고 비정형 형태 노동자들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어 경제회복 추세를 체감하기는 이르다고 할 수 있음.

2.2021년 하반기 경제여건 전망 (*기획재정부_2021.6.28.)

- 수출은 미·중 등 주요 교역국 경기회복세 강화, IT산업 및 신산업 수요확대 등에 힘입어 연간 최대치인 6,075억불 달성 전망
- 투자는 반도체 등 IT부문 호조에 더하여 비IT 부문도 신기술·친환경 투자 확대 등으로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 내수는 백신보급 확대 및 심리개선, 소비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이연된 소비가 분출되면서 개선
- 고용은 민간부문 여건이 개선되고 정책지원 효과등으로 증가세는 지속되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어려움은 지속

【분석&해설】

- ▷ 하반기에도 국내 경제지표는 빠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나 부문별 회복 속도가 불균등한 가운데 경제 사회구조 전환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 정부는 고용과 관련 상용직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대면서비스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비정형 노동자들의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 내수경기의 회복도 부문별로는 불균등하게 나타날 것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부진 등으로 시장소득 격차해소는 제약될 가능성이 높음. 소득뿐만아니라 주거·교육·돌봄·자산 등 전반적으로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 경제위기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은 상존 할 수 있음.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수급개선으로 오름폭이 점차 둔화될 전망이나, 국제유가 및 하계 기후변화 등으로 리스크는 잠재함
- ▷ 자산시장도 유동성 급증에 따른 자금 쏠림, 부동산 및 가계부채 문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등은 회복세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3. 2021년 KT 경영실적(1Q) (*KT IR PT_2021.05)

● 통신과 플랫폼 사업의 균형잡인 성장과 그룹사 실적개선으로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KT별도 기준으로 21.4% 두 자리수 성장을 달성함

● B2B 및 금융/미디어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 성장세가 뚜렷하고, B2C 사업이 우량가입자 확대로 매출성장은 지속하는 반면 유선전화 매출감소는 감소세로 안정화 단계임. k-뱅크,뱅크샐러드, KT스튜디오 지니 등 미래 성장사업 중심으로 그룹 사업을 재편하고 전략투자를 실행하여 성장중심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있음.

● 통신 디지털전환 수요증가로 IDC, Cloud 등 AI/DX사업이 전년대비 7.5% 성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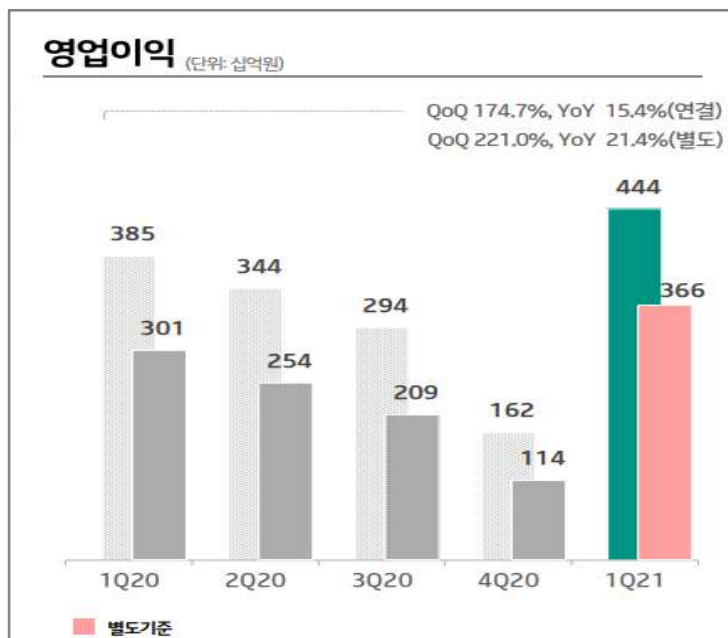
● KT스튜디오 지니 설립후 현물출자 등 그룹 콘센츠 사업구조가 개편되고 Sky-TV중심 예능 콘텐츠 흥행이 성공하면서 콘텐츠 포트폴리오가 확대 추세임. BC카드는 매입액이 회복되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성장하고 있으며 케이뱅크는 수신/여신/고객수 모두 급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 B2C 무선은 5G가입자 확대로 보급률 31%를 달성했으며 서비스매출은 전년대비 2.2% 성장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터넷-IPTV가입자가 순증하며 매출이 성장함.

● B2C 유선은 기업회선 증가에 따른 업무용 가입자 비중이 증가하여 매출 및 가입자 감소폭은 둔화함

【분석&해설】

▷KT는 '21년1분기 재무성과가 플랫폼 사업과 통신사업의 성장으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증가하였는데 별도기준 매출은 4조5천745억원 전년대비 3.3%로 성장, 영업이익도 3천660억원을 달성해 전년대비 21.4%로 성장함.

▷KT는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분기 실적에 대한 회계가 안 끝난 상태이지만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은 줄었지만 5G를 비롯한 상품의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데이터요금제 가입등 ARPU(가입자당 순이익)가 증가추세임. 비대면으로 인해 IDC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호황이고, 금융·부동산 등 비통신사업도 실적개선에 기여할 것임.

▷다만 설비투자 등의 비용을 하반기에 집중하는 등 경영성과지표 착시현상은 경계해야함

노동 이슈

4. 개정노동관계법 7월6일부터 시행

법안	현행법 조항	개정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자가 아닌 자, 해고자 노조가입 불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불가는 현행유지, ‘해고자’ 노조 가입은 허용 -사업(장) 종사자와 비종사자 구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삭제)
	고용노동부산하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	경사노위 산하 근로시간면제위원회 -노사공익 5명씩 구성
	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	교섭단위 분리(현행법)뿐 아니라 통합도 결정
	단체협약 유효기간(2년)	단체협약 유효기간 최대 3년 이내로 연장
근로 기준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가능 -근로일 사이 11시간 휴식 보장 -2주 전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임금보전방안 마련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이내)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업무 경우 3개월 이내까지 가능 -근무일 사이 11시간 이상 휴식보장 -1개월마다 평균 1주 40시간 초과할 경우 가산수당 지급

- 정부가 6월22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음.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에 맞춰 지난해 12월 개정된 노동관계법이 7월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또한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효력을 잃은 '노조아님 통보'를 폐지하고자 한 것임.
- 이에앞서 한국노총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① 정부의 법외노조에 대한 시정요구 규정 삭제 ② 근로시간면제제한제도 산정 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면제시간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시정결정도 따르지 않을 경우 조치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시행령 의결에 반영하지 않았음.

【분석&해설】

▷ 2020년 12월 9일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지만,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동시에 함으로서 노동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 노조법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조법 제2조4호 조항이 수정되어 해고자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음. 이로써 해고자 조합원을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교조등의 합법화길이 열렸음. 다만 '근로자가 아닌자'의 노조 가입 금지는 유지돼 '특수 고용직'의 경우 노조결성이 제한됨.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은 삭제되었음.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한도를 기존의 조합원수와 지역별 분포외에 연합단체활동도 고려토록 했음.

이를 계기로 전국에 7개 지방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합단체인 KT그룹노조협의회와 상급단체인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활동을 하고 있는 KT노동조합의 특성에 맞는 '타임오프' 제도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단체협약의 효력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됨. 법대로 적용할 경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은 3년에 한번 실시하게 되고, KT노사 단체협약을 올해 단체교섭에서 갱신하면 그 효력이 2024년까지 유지됨. 단체협약 갱신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도 비교적 안정화된 KT 노사관계를 감안하면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근로기준법개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제 단위(※시간외수당 정산기간) 확대가 핵심임. 현행 최장 3개월 단위에서 6개월로 확대되어 개악된 것임. 다만 kt는 연장근로 관련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직접적 영향은 적으며 대표 노조의 합의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제도임으로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임.

5.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천160원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160원(월 191만4천440원)으로 결정됐음. 올해 8천720원보다 5.1% 오른 금액임. 7월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함.
- 당초 노동계는 최저임금으로 1만800원(23.9%) 인상을 요구했고, 사용자측은 동결을 주장한 바 있음. 3차례의 수정안을 제시하는 동안 1천150원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9천30원(3.56%)~9천300원(6.7%) 인상안을 제시했음.
- 이에 민주노총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은 9천160원을 단일안으로 제시했음. 공익위원의 단일안에 반발한 경총이 퇴장해서 기권처리된 9명을 포함 표결에는 23명이 참여해 찬성 13 기권 10으로 가결되었음.

【분석&해설】

- ▷ 공익위원 단일안인 5.1% 인상안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4%와 물가인상률 전망치 1.8%에 취업자 증가분 전망치 0.7%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임.
- ▷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결국 무산됐음. 또한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박근혜정부 인상률 7.4%보다도 낮음.

6. 경사노위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출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7월6일 오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식과 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음. 개정 노동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에서 경사노위로 이관된 뒤 열린 첫 회의임.
- 심의위의 핵심 쟁점은 개정 노조법 부칙에 드러난 바 “법 시행 즉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조합원수,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합단체에서의 활동 등 운영실태를 고려해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에 착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분석&해설】

- ▷ 핵심쟁점은 상급단체 파견전임자를 타임오프 한도에 포함할지 여부임. 8년전 열린 심의위에서 공익위원들은 “단위사업장 노조의 전임자를 상급단체에 보낼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음.
- ▷ 가중치 재조정 문제도 노사간 공방이 예상됨. 현행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수에 따라 10개 구간으로 시간한도를 2천~3천600시간으로 나누고 있음. 1천명 이상 사업장중 2개 이상 지역에 근무지가 있는 가중치를 10~30% 부여하는 내용으로 규정돼 있음.
- ▷ KT는 조합원수 1만8천명에 7개 지역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연합단체인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핵심 쟁점 사안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임.
- ▷ 근로자위원 대표인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을 구체화하고 노사자율 교섭원칙을 실현하고, 사업장별 다양한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음.

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 정부가 7월12일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음.
- 시행령은 15개 조항으로 모법에서 위임한 △중대재해 직업성 질병범위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범위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임.
- 모법에서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 1명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 3명이상으로 규정함.
- 한편, 중대산업재해를 수사하는 전담조직의 역할에도 주목되는데, 고용노동부는 7월1일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하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를 두는 등 직제를 개편했고, 지방관서에도 광역중대재해수사와 예방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확대했음.

【분석&해설】

▷ 시행령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를 일산화탄소 중독, 열로 인한 중추신경계 이상(열사병) 같은 유해인자 취급으로 인한 질병 24개로 제한 했음. 지난해 업무상 질병 사망자(1천180명)의 39.2%를 차지하는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직업성 암·근골격계질환 등은 해당되지 않아 노동계의 비판이 높음.

▷ 시행령은 경영책임자 처벌의 근거가 되는 안전보건의무 관련 안전보건인력배치에 대해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300명 이상만 전담인력을 배치토록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자 배치기준을 준용했음. 또한 중대시민재해는 ‘적정 인력배치’ 의무만 규정했음.

안전보건 예산은 적정예산편성 의무만 규정하고 경영책임자 범위도 한정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임. (*)